

## 기억작업(memory work)으로서 민주화 관련 기념시설 조성의 의미와 과제: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경 섭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사,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도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국가폭력과 민주화 관련 사건을 기념하는 활동과 기억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활성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5·18 해결의 5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보상, 명예회복, 기념사업은 하나의 모델이자 행정적 선례가 되고 있다. 5원칙은 문제해결의 프로세스이자 사건을 규정짓는 틀이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기념사업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추모시설과 기념관의 건립은 기억작업 memory work의 과정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따라서 기념시설의 구상과 건립은 사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단한 재생산, 기억의 전달과 변용, 기념과 기억의 주체 구성을 포함하는 질문과 과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5·18 관련 기념시설의 완결로 간주할 수 있는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민주화 관련 역사기념시설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화 관련 기념시설에서도 보존과 활용은 대부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일 수 있다. 따라서 타협과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보존과 활용의 적절한 조화가 피해당사자와 정부와 전문가 사이의 조정과 합의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폭력 및 민주화 관련 기억공간의 조성 과정은 당사자와 비당사자, 세대를 넘어 함께 공감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국가폭력 및 민주화 관련 역사적 현장의 보존, 사실의 기록과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장과 기억공간이 동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질문과 상상과 연결되는 것, 즉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부단한 현재화와 재창조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했던 성역화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기억공간을 기억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질문의 공간, 성찰의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이다. 이는 옛 전남도청 복원과 기념공간 조성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인권기념관을 포함한 다양한 민주화 역사시설의 공통 과제이다. 민주주의와 인간과 폭력에 대한 질문과 성찰의 공간으로 기억공간을 조성하는 것, 옛 전남도청을 다시 짓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